

여론 조사: 알버타 주민들 전염병보다 경제적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

여론조사기관 요크빌이 알버타 보수당 정부에 대하여 알버타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보다 COVID-19의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 72 %가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의 위협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조적으로, 약 30 %만이 질병 자체를 잡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 가족과 건강에 대한 우려는 최대 약 45 %를 차지했다.

내년에 알버타 주에 대한 더 큰 위협을 선택하라는 요청에 따라 47%가 유가가 낮은 점, 40%가 전염병 위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놀라운 결과는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크 헨리 독립 여론 조사원은 심각한 경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경제를 너무 일찍 개방하면 경제를 더욱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립 조치의 갑작스런 종말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크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COVID 위기를 처리하고 알버타주의 경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82%에서 90%의 주민이 긍정적 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설문 조사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1,011명의 알버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정확도의 오차는 4%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3%이

다. COVID-19 조치에 대한 명백한 높은 주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케니 정부의 일반 등급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Henry는 위기 자체에 대한 UCP 처리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영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70년대 중반에 위치하게되었습

니다”라고 말했다.

“COVID-19에 대한 우리는 상당히 높지만 경제와 고용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헨리가 설명했다.

요크빌 조사에서 정부는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제한을 완화하고 COVID-19의 두 번째 물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질병을 평준화하고 경제의 재개를 서두르기 위해 다양한 특정 조치를 지지하는 대다수가 있으며 정신 건강분야에 관한 불안한 결과는 이미 정부가 정신 건강 기금에 3,500만 달러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여성의 78%와 남성의 71%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위

기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18-54 세 그룹에서 대다수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전적으로 COVID-19 문제와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헨리는 이번 발견에 더 어두운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케니 주지사 자신이 위기에 관한 질문과 관련이 있을 때 지원은 50% 중반으로 떨어졌고 정부의 전반적인 성과는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버타 주민들은 케니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과 마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헨리는 일반 주민들이 COVID-19를 다루는 전문가, 특히 건강 관리 책임자인 Deena Hinshaw 박사를 높게 지지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케니 주지사의 이번 전염병 대책에 관해서는 감명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케니 주지사가 자신의 COVID-19 대책에 대한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돈 브레이드 / 켈거리 헤럴드

정의연 비판한 故 심미자 할머니 자필 일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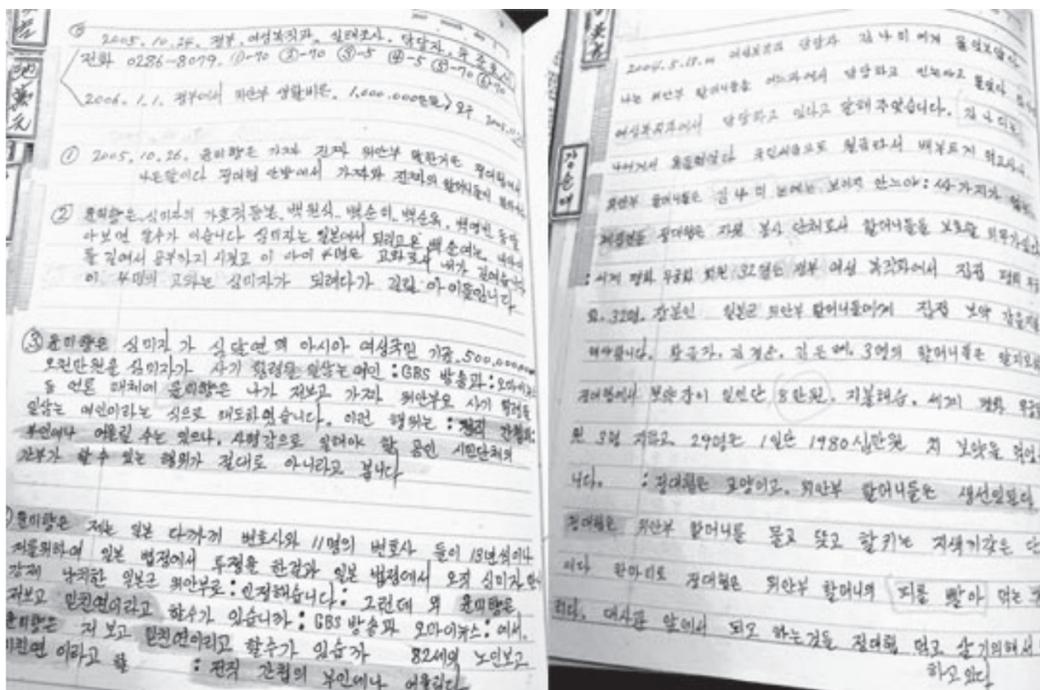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에 비판 목소리를 내던 고 심미자 할머니가 살아생전 자신의 일기장에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느낀 점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 친필 일기가 발견됐다. 이는 15년 전 정대협 활동에 대한 제3자의 기록이 아닌 심 할머니 당사자의 기록이어서 ‘날 것’ 그대로의 심경이 담겨 있다.

심 할머니는 2000년대 초반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인으로 구성된 세계평화무궁화회를 조직, 무궁화회 회장 역할을 맡으면서 2008년 별세하기 직전까지 정대협 활동에 반기를 들어왔다. 2004년엔 정대협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 행위 및 시위등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금 관련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정대협은 그런 심 할머니를 되레 모욕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령비인 ‘대지의 눈’엔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바 있다.

주간조선이 단독 입수한 심 할머니 자필 일기장 일부 내용에 따르면 심 할머니는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자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다음은 심 할머니가 쓴 일기의 일부 분이다. 일기의 특성상 오타 자를 있는 그대로 싣는다. 괄호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의 해설이다.

“정대협은 교양(교양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인 것이다.(생선이 된다.)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를 물고 뜯고 핏기는 지새기겠다는(‘쥐새끼 같은’으로 보임) 단체이다. 한마디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다. 대사관 앞에서 되모(데모) 하는 것을 정대협 먹고 살기 위해서 되모 하고



있다.”

“윤미향(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카베에서(KBS) 기자와 정대협 모금한 돈에 대한 인터뷰(인터뷰)에서, 심지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되모하지 말 것. 일본 대사관 앞에서 되모하는 이유는 정대협 식구들이 먹고살자는 이유. 모금하는 이유는 정대협의 윤미향(윤미향)의 재산모우기 위해(위해) 모금을 하고 있음. 위안부 할머니와는 아무런 관계(관계)가 없음.”

“저는 정대협 측의 준비서면(2004년 모금행위 및 시위등원 금지 가처분 관련 서면)을 읽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대협이 각 할머니에 대해 그 진위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정확한 기록과 조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의 기분대로 속칭 ‘장사(장사) 마음대로 판정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대협에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정대협에 저항하는 할머니

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인신 공격과 모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2005년 11월 12일)

이밖에도 일기장에 2004년 정부를 상대로 무궁화회를 법인으로 내달라는 진정서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심 할머니는 법인체 설립으로 정대협과는 다른 방향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운동을 이어 가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각하 저허들은 일본군 위안부 장본인들은 전생이 실습니다.(싫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33명의 혼이 담긴 무궁화 꽃으로 세계 평화를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 각하 저허들 무궁화 회원 33명의 장본인들 이름으로 법인체를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윤미향의 기막힌 타이밍 잡기 '금요일 오후', '임기 시작 D-1'

尹, 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에 돌연 기자회견 '방탄 국회' 오명 피해하고 언론과 대중 주목도 떨어지는 금요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

자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뒤 자취를 감춘지 11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9시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윤 당선자 기자회견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고심 끝에 최적의 타이밍을 선정

▲ 고 심미자 할머니의 육필 일기장 일부 내용. photo 박영길 전 경기도의회 의원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9일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이다. 잠행을 하던 윤 당선자가 돌연 이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선언한 데에는 여러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1990년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로 참석한 심미자 할머니가 법원 밖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photo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우선 윤 당선자 입장에선 국회 개원 전에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함으로써 국회를 방해 삼아 논란을 피하려 한다는 이른바 ‘방탄 국회’ 비판을 비켜갈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국회 개원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자는 21대 국회가 개원(開院)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주어진다.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 제기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당선자측이 ‘불리한 뉴스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요일 오후에 털어버리자’는 기존의 관행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불리한 뉴스를 ‘금요일 오후’에 릴리즈(release)한다는 관행이 있다. 언론에서 기사화를 하더라도 이미 ‘주말 모드’에 들어간 독자의 관심을 끌기 쉽지 않아 특정 사안의 충격과를 최소화하고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오랜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국방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등이 대표적이다.